



# ‘신한올3.4호기 건설을 당장 재개하라’

- 두산중공업 지금 살려내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2020. 3. 19.



비즈니스시민회의 보고서

# ‘신한울3·4호기 건설을 당장 재개하라

- 두산중공업 지금 살려내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I 머리말

두산중공업이 휴업을 선언했다.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2017년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고 공장가동률은 100%에서 작년 60%로 올해엔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22,000원에서 4,700원으로 75%가 빠졌다. 이미 2,400명에 대해 순환휴직을 강행했고 임원의 20%를 감원했다. 2,600명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추진했으나 신청자가 적어서 이제 강제퇴직을 시키기에 이르렀다.

신한울3·4호기를 살려내야 하는 절박한 이유는 단순히 원전산업 살리기가 아니다. 두산중공업과 창원지역 소재 170여개 협력사를 포함한 전국 800여개의 협력사가 그 이유이다. 신한울3·4호기를 살려달라는 청원은 30만을 넘어 지난해 1월 청와대에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으나 청와대는 답변대신 ‘산업부에 물어보라’는 싸늘한 회신을 하였다. 그 청원이 이제 50만을 넘고 70만에 육박하고 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수많은 기사와 사설도 외면하고 있다.

최근 원전부품 중소기업체들이 청와대로 보낸 신한울3·4호기를 살려달라는 요청에 산업부는 원전산업정책과장 명의로 싸늘하게 ‘불가’를 통보하였다. 과연 대한민국의 산업을 총괄하는 정부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인가? 성의없는 답변이라는 비난이 일자 산업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답변이었고 각종 보완대책이 추진중이거나 계획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런데 원전산업 전체에 대해 수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약 10조 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한 기업에 대한 대책이 되겠는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다.

## II

### 원자력 산업 발전 과정

“기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산중공업의 전신은 한국중공업이다. 중화학공업 육성을 기치로 1960-1970년대 집중

적인 투자를 통해서 한국중공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바다를 통해 물류를 해야만 하는 중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다를 매립하고 부두를 만들었다. 당시 돈으로 3,810억원이 소요되었다. 지금의 가격으로 하면 수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뿐만아니라 그 막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해안을 매립하고 공장을 설립하는 일이 지금 다시 한다면 가능할까? 각종 규제와 민원에 물려서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중공업을 설립할 수 없을 것이다.

원전산업 국산화 정책에 따라서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지원을 통해서 한국중공업은 오늘의 기술력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에 품질보증이라는 말도 없던 시절에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7,000톤의 단조프레스, 지붕이 있는 공장으로는 최대 규모의 터빈공장, 국내 유일의 원자력공장, 자체 부두를 갖추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주기를 척척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용 로터샤프트, 원자력여자시스템 등 원자력 분야에서만 4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선도기업으로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하였다. 해외에 의존하던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설비를 협력업체와 함께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이 그 증거이다. 기술력을 나누고 일감을 나누면서 동반성장을 해왔다.

국내 사업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다. 미국내 신규원전인 보글3·4호기 등에 원전 주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세코야1·2호기 및 와츠바1·2호기 증기발생기 등 교체를 위한 부품도 꾸준히 납품하고 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캐나다 원자력공사가 중국에 수출한 원전의 주기도 모두 두산중공업에서 공급했다. 실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발전용기자재 공급업체가 된 것이다. 최근에도 러시아 원전의 부품이라도 수주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2009년 UAE 원전수출 이후에는 미자립 기술이었던 원자로냉각재펌프 및 원전계측제어설비도 국산화하였다. 이제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두산중공업에서 원전의 주요부품을 모두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원전수출협상에서도 높은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대해서는 탈원전 영향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의 물량과 일부 석탄발전소의 물량이 빠진 것을 합치면 10조 원에 매출액이 빠져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었던 원전이 백지화 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당연히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앙이다. 과연 10조원의 매출이 줄어들고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두산중공업에 휴업은 그것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두산중공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2,000여 개 협력사들은 두산중공업의 일감부족에 따라 외주물량이 줄면서 이미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두산중공업에 휴업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 III

## 원자력 발전은 양질의 일자리 복지 “하나의 기업은 하나가 아니다.”

작년 1월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소장은 대통령께 창원 경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청했다. 그것이 원인인지 몰라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하여 기업이 함부로 입을 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거리를 잃은 협력사에 무엇으로 보상하겠는가? 그 직원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정부가 빼앗아 나눠주는 ‘세금주도 복지’로 얼마나 연명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시적 일거리가 아니라 상시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큰 걱정이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다시는 두산중공업과 같은 중공업 기업이 다시는 탄생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누가 이 막대한 투자를 다시 해서 기업을 만들 것이며 한번 꺼진 불이 다시 켜지는 것이 가능할지 또 천우신조로 국내외에 중공업 수요가 있어서 거대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양질의 기술인력이 공급되고 이들이 죽어라하고 일하는 풍토가 돌아올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두산중공업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두산건설에 막대한 수혈을 한 것을 비난할 수 있다. 또 두산중공업이 사기업일 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과 수많은 협력사는 그냥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정부가 보완대책을 수립한다고 부산델 것 없이 두산중공업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신한울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한수원이사회가 신한울3·4호기의 건설 중지를 결정할 때부터 많은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

첫째,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에서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위해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 재검토는 없어지고 일방적 선언을 해버린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거짓주장과 함께 선포된 탈원전 정책에 대한 행정적 검토는 없었다.

둘째, 국무총리훈령 제690호에 의해 신고리5·6호기의 운명에 국한된 공론화의 결과를 가

지고 김지형 위원장은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는 도를 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2기에 대한 논의결과를 전체 원전에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셋째,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에 발표된 권고안은 불과 다음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5분간 보고안건으로 논의된 후 '탈원전 로드맵'으로 포장된다. 검토고 뭐고 할 시간이 없었다. 이후 이 로드맵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을 초월하여 국정을 농단한다.

넷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탈원전 로드맵을 언급하면서 별다른 논의없이 신한울3·4호기가 사라졌다.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을 추가하고 당초의 정책방향을 변경하면서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은 2017년 12월 27일 국회에 보고하고 다음날인 28일 공청회를 간단히 개최하고 29일 오전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국회와 공청회 의견은 수렴될 틈이 없었다. 공청회와 국회는 우회된 것이나 진배없었다.

산업부는 2017년 사업허가를 내준 신한울3·4호기를 백지화했다.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업부는 전력수급계획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주장하며 책임은 회피하면서 한수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다.

한수원은 신한울3·4호기의 건설을 중지하였다. 건설이 이미 진행중이고 두산중공업에서는 기자재를 한참 만드는 중에 이루어진 중지결정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개최 1주일 전 공지의무와 긴급상황에서의 24시간 전 공지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사업허가를 받은 원전의 사업권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였다.

신한울3·4호기는 중단이 아니라 중지이다.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한수원의 묘수였다.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나 그 주주들은 손해배상도 할 수 없게 만든 낮간지러운 꼼수였다.

## IV 결론

경기가 어렵다. 건설경기는 더 어렵다. 일자리는 줄고 있다. 40년간 일군 원전산업은 두산중공업의 휴업과 함께 침몰해갈 것이다. 이것은 비단 원전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전국에 흩어진 2000여개의 기업과 우리나라 중공업의 침몰이다. 또한 이들이 40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의 증발이다.

두산중공업을 잃게 만든 것은 지난 40년간 소중히 키워온 산업에 대한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 폭거이다. 일으키기는 어렵고 부수기는 쉬운 법이다. 세계가 부러워하

는 기업이 편향된 정치이념에 따라서 무너져가고 있다. 보조금 따위로 될 일이 아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신한울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기를 촉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꺼져가는 원전산업의 생명이라도 유지해야 한다. 중공업을 살리고 협력업체를 살리고 건설경기를 살리고 울진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또 그래야 원전수출이라도 할 것 아닌가? 정부는 이 절규를 들으라.